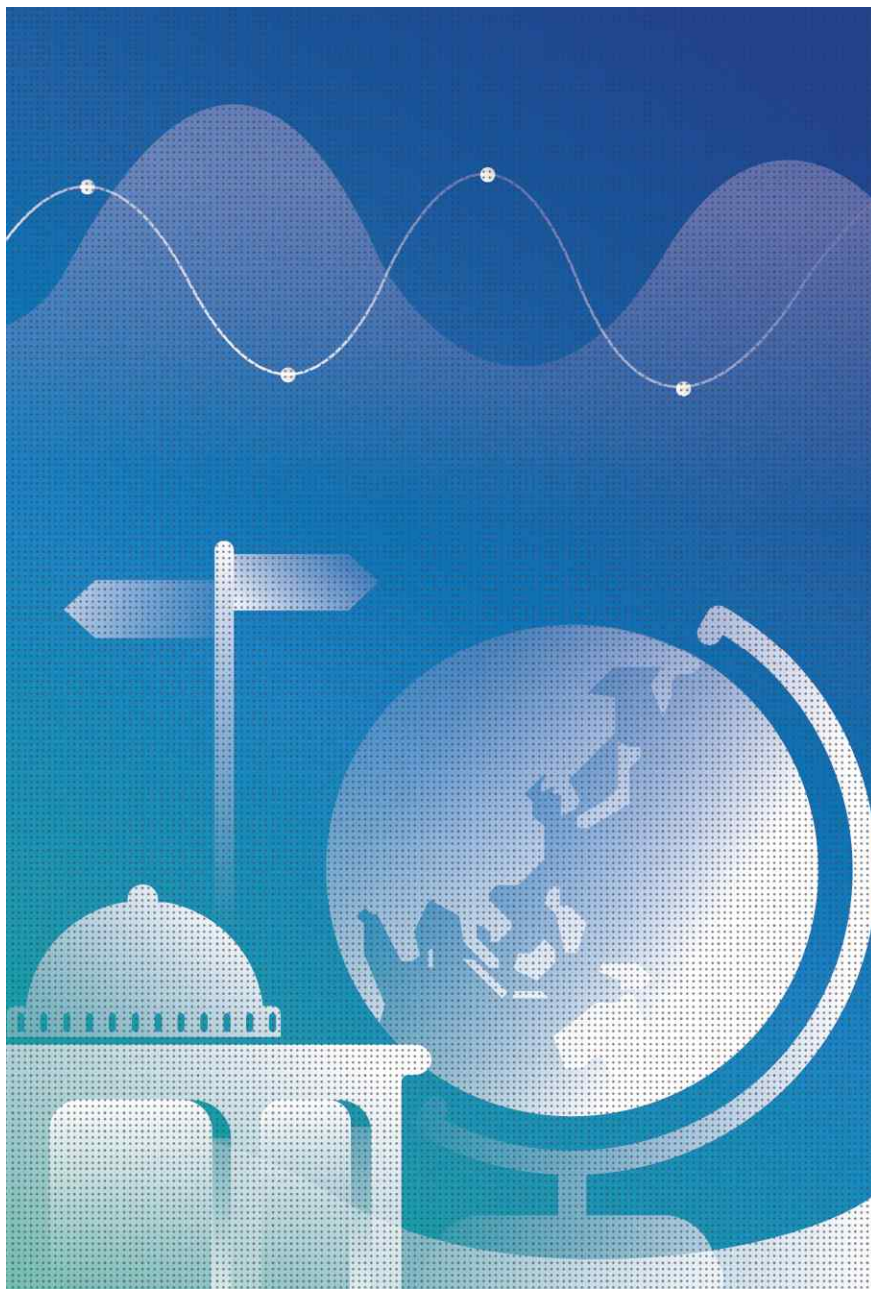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1-지역이슈-17(2021.12)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탈퇴 가능성 분석



CONTENTS

- I. 폴란드와 헝가리, 정치/사회적 이슈로 EU와의 갈등 고조
- II. 폴란드와 헝가리의 대EU 경제의존도 분석
- III. 결론 및 시사점

작성

팀장 오경일 (02-6252-3584)

oki1122@koreaexim.go.kr

<요 약>

I. 폴란드와 헝가리, 정치/사회적 이슈로 EU와의 갈등 고조

- **(EU와의 갈등)** 폴란드와 헝가리는 1999년 3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데 이어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에도 가입하였으며,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EU와 NATO의 양대 국제기구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폴란드와 헝가리 모두 정부 및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언론 자유에 대한 억압,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제도화 등을 시도함으로써 EU가 지향하는 정치적, 사회적 가치와 상반되는 행보를 거듭하여 EU와 갈등을 빚고 있음.
- **(갈등의 배경)** 폴란드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시도로 EU와 정면 충돌하고 있으며, 낙태 및 성소수자 권리 등의 문제에서도 EU와 갈등을 빚고 있음. 헝가리 정부와 여당 역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시도 및 난민 문제로 EU와 갈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민주주의 훼손과 언론 탄압을 자행하여 EU의 비판을 받고 있음.
-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탈퇴 가능성)** EU는 회원국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폴란드와 헝가리에 법치주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있음. 이에 일각에서는 Brexit(영국의 EU 탈퇴)에 이어 Polexit(폴란드의 EU 탈퇴)와 Hunexit(헝가리의 EU 탈퇴)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II. 폴란드와 헝가리의 대EU 경제의존도 분석

- **(EU 예산 수령과 재정수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간 28개 회원국들이 수령한 EU의 예산지출 누적액 중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예산 수령액은 각각 폴란드와 헝가리의 재정수입의 7.9% 및 10.0%에 해당됨. 따라서 폴란드와 헝가리는 EU를 탈퇴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가 현저히 악화됨.
- **(무역의존도)** 최근 10년 간(2011~20년) 폴란드는 상품수출액의 70% 이상 및 상품수입액의 50% 이상, 서비스수출액의 60% 이상 및 서비스수입의 70% 이상이 EU에 편중되어 있으며, 헝가리는 상품수출액과 상품수입액, 서비스수출액과 서비스 수입액 모두 70% 이상이 EU에 편중되어 있음. 따라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EU를 탈퇴할 경우 교역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폴란드와 헝가리는 특히 EU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접근 및 EU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인력 이동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 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유치해 오고 있음. 따라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EU를 탈퇴할 경우 FDI 유입 급감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의 감소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

III. 결론 및 시사점

- **(EU 탈퇴 가능성은 매우 희박)** 이처럼 폴란드와 헝가리 모두 EU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고, 보조금 수혜, 무역 및 투자 유치상의 이익 등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이익이 EU 탈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보다 월등한 것으로 판단되어, 폴란드와 헝가리가 실제로 EU를 탈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관측됨.
-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폴란드와 헝가리 2개국의 제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누계액은 유럽 전체 제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누계액의 22.9%를 점유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탈퇴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EU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들의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직접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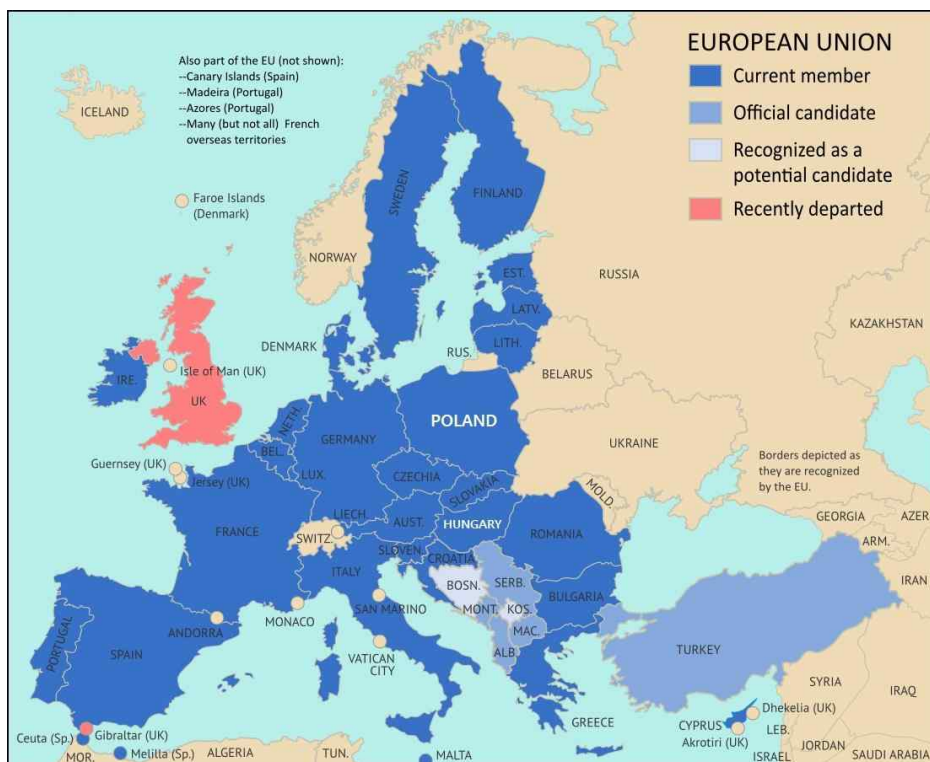


I. 폴란드와 헝가리, 정치/사회적 이슈로 EU와의 갈등 고조

폴란드와 헝가리, 최근 정치/사회적 이슈에 따른 갈등으로 EU 탈퇴 가능성 제기

- 폴란드와 헝가리는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에 가입하였음. 당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키프로스, 몰타도 함께 가입하면서 EU 회원국이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한꺼번에 급증하였음.
- 이후 2007년 1월 1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가 각각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총 28개국으로 증가하였음. 외국에서는 회원국이 28개국으로 증가한 후의 첫 해인 2014년부터의 EU를 이전과 구분하기 위해 EU-28로 지칭하고 있으나,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결행하며 EU-28도 종언을 고하였음.
- 아울러 폴란드와 헝가리는 1999년 3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 구소련 및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 후에도 계속되는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미국, EU와 공동 보조를 유지하며 맞서고 있음. 따라서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EU와 NATO의 양대 국제기구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폴란드와 헝가리 모두 정부 및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언론 자유에 대한 억압,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제도화 등을 시도함으로써 EU가 지향하는 정치적, 사회적 가치와 상반되는 행보를 거듭하여 EU와 갈등을 빚고 있음.

[그림 1] EU 회원국 지도(2021.11월 말 기준)



자료: www.polgeonow.com



폴란드 정부/여당,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시도로 EU와 정면 충돌

- 폴란드는 2015년 애국주의, 反난민, 反공산주의, 가톨릭 보수주의 성향의 법과정의당(PiS)이 집권한 이후 2019년 총선에서도 상·하원에서 다수 의석 유지로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해 왔으며 2020년 7월에 실시된 대선에서도 여당이 지원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당선되었음.
- 그러나 폴란드 정부와 집권 여당은 난민, 동성결혼, 낙태 등의 사회적 이슈로 EU와 갈등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의회 다수당이 사법부를 사실상 통제코자 시도하면서 EU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두다 대통령은 현재는 무소속이나 2015년 대선에서 PiS 후보로 당선되었으며, 현재까지 집권 여당의 지원을 받고 있음. 2020년 7월 대선에서 두다 대통령은 집권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51.2%의 득표율에 머물러 48.8%의 득표율을 기록한 '시민연대' 소속 후보에 2.4%p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음.
- 2017년 7월 12일 폴란드 의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사법평의회(National Judicial Council, 약칭 NJC)의 구성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였으며, 동법은 2018년부터 발효되었음. 기존 시스템에서는 법원의 현직 판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판사를 인선하였으나, 동법에 따라 하원이 지명한 인사들이 다수를 구성하는 NJC가 판사를 인선토록 함으로써 판사 임명권을 사실상 의회에 부여하였음.
- 이는 집권 여당인 PiS가 판사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사법권을 장악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해석되어, 폴란드 정부는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였음.
- NJC 위원들은 폴란드 판사들의 판결 내용을 검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된 판사를 소환/조사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임할 수 있음. 또한 대통령은 NJC가 추천하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법개혁'은 이름과 달리 사실상 집권당이 원하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선출토록 만든 것임.
- 아울러 폴란드 정부는 대법관의 정년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여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중 약 3분의 1을 해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법무부의 유임 승인을 받지 못한 법관이 모두 사임토록 했음. 이어 2018년에는 대법원의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대법원 징계위원회를 신설하였음.
- 이처럼 폴란드 정부 여당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가 갈수록 악화되자,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19년 6월 24일 폴란드 사법개혁이 EU법을 위반하고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였음. 그러나 폴란드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2020년 2월 4일 사법개혁을 비판해온 판사에 대한 징직 및 임금 삭감 처분을 내렸으며, 같은 날 두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판사 임명에 대한 다른 판사들의 이의 제기를 금지하고 사법부의 자치권 행사 및 정치활동도 금지하는 내용의 새 법안에 서명하는 등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치를 계속 강행하였음.
- 이에 결국 ECJ는 2021년 7월 14일 폴란드 정부에 NJC의 기능 및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리고, 8월 16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였음.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무시하였고, 10월 7일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법관 관련 법 조항에 있어 폴란드 국내법이 EU 조약 등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하여 EU와 정면으로 대립하였음.



- 그러자 ECJ는 10월 27일 폴란드 정부가 임시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EU가 폴란드에 매일 1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이는 1952년 ECJ 출범 이래 회원국에 부과한 벌금 중 최고 액수로, EU 차원의 각종 조약 등이 개별 회원국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임.
- 한편, ECJ의 동 판결에 앞서 10월 19일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집행위원회가 폴란드 정부를 EJC에 제소하거나 폴란드에 대한 EU 기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리스본 조약 제7조의 발동도 검토 중이라고 경고하였음.
- EU의 법 체계를 종합한 리스본 조약(2009년 12월 발효)의 제7조는 EU의 근본 가치(3권 분립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법치주의 준수, 소수자 차별 금지 등)를 역행하는 회원국에 대해 투표권 박탈 등의 권리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폴란드는 낙태 및 성소수자 권리 등의 문제에서도 EU와 갈등

- 2020년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기형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기존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의 전국적 시위가 발생했고, 현재 결정이 발효된 2021년 1월에도 다시 시위가 재개되었음.
-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폴란드 정부는 현재 결정의 발효를 3개월 연기하였으나, 2021년 1월 결국 현재 결정이 발효되자 이후 바르샤바 등 주요 도시들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음.
- 가톨릭 보수주의 성향이 대단히 강한 폴란드는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로, 보수 우파세력인 PiS는 2007년, 2016년 및 2018년에 걸쳐 전면적인 낙태 금지 법안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물론 EU도 이를 비판해 왔음.
- 아울러 폴란드 정부는 특정 지역에 'LGBT free zone'을 만들고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성소수자 억압 정책으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EU도 폴란드 정부의 성소수자 억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낙태, 성소수자 권리 등의 사회적 이슈를 가톨릭 보수주의의 시각으로 다루는 폴란드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EU가 중시하는 현대 국가의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여타 EU 회원국들로 하여금 폴란드의 EU 회원국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헝가리 정부/여당도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시도로 EU와 갈등

- 헝가리 역시 2018년 4월의 총선에서 현 집권 여당인 청년민주동맹(FIDESZ)과 기독교민주인민당(KDNP) 주도의 보수 우파 연합이 전체 199석 중 133석(66.8%)을 획득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자신에 대한 권력 집중의 기회로 이용한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주도하에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과 인권 관련 현안 등에서 EU 지도부와 갈등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여당 연합의 집권이 계속되는 한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됨.
- 1998년 7월~2002년 5월 총리직을 역임한 뒤 2010년 5월 총선 승리로 다시 총리직에 취임한 오르반 총리는 2014년 및 2018년의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하여 총 14년째 재임해 오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제도 개혁을 장기간에 걸쳐 실행에 옮기고 있음.



- 2018년 4월 총선에서 의회 의석의 66.8%를 차지하며 의회를 장악한 여당 연합은 동년 12월 법무장관의 감독을 받는 행정법원을 1년 내에 설립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동 법안의 핵심 내용은 선거법 관련 사건, 부정·부패 사건, 집회·시위 등 공안 사건 등 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기존 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며, 행정법원 판사에 대한 임용, 승진, 교육의 권한을 대법원장이 아닌 법무장관이 행사한다는 것임.
- 이는 정부-여당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수사·기소는 물론 재판에 대해서도 법무장관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함.
- 행정법원 설립안 통과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의 침해라는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져 2019년 9월 16일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헝가리의 사법부 및 언론의 자유 말살 정책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음, 동 청문회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를 전면 철회할 것을 헝가리 정부에 요구하자, 2021년부터 7년 간 헝가리에 배정된 EU 보조금 201억 유로의 삭감 가능성을 우려한 헝가리 정부는 11월 1일 행정법원 설립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음.

헝가리 정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민주주의 훼손과 언론 탄압

- 코로나19 사태가 헝가리로 확산되자 오르반 총리는 방역 강화를 구실로 2020년 3월 11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3월 30일 헝가리 의회는 코로나19 방지법을 찬성 137표, 반대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하였음.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법률을 제정·발효시키거나 기존 법률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
- 동법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총리에게 근거 법률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통치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종료시킨 없이 부여하고, 총리가 국가비상사태를 의회의 승인 없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고, 민주적 통제의 감소와 언론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 조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 또한 헝가리 의회는 2020년 3월 30일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해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에게는 최고 5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코로나19 방지법과 함께 통과시켜, 오르반 총리가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졌음. 동 개정안은 가짜 뉴스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가짜 뉴스에는 '정부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효과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 헝가리 언론은 동법의 통과로 관영 매체들이 특히 독립 언론인들에 대해 혐오 캠페인을 펼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법 시행 후 독립 언론인들이 헝가리 정부에 의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급증하였음.
- 이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월 12일 "헝가리 정부가 허용 한도를 넘어서면 (EU 차원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하였음. 이어 4월 17일 유럽의회는 코로나19 방지법이 "유럽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였으며, 5월 12일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오르반 총리에게 14일 코로나19 방지법에 대해 토론하자는 서한을 보냈으나 거부당했음.
- 다만, 5월 26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데 이어 6월 17일 코로나19 방지법 폐기가 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정부가 공공보건상의 이유로 재차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가짜 뉴스 처벌' 등을 위한 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겼음.



헝가리는 난민 문제에 관해서도 EU와 반목 중

- 2018년 6월 헝가리 의회는 일명 Stop Soros Law라 불리는 반(反)난민법을 찬성 160표, 반대 18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음. 동법은 난민의 헝가리 내 체류를 돕거나 재정지원을 제공한 개인 및 단체에 최고 징역 1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난민 지원단체를 후원해온 헝가리 출신의 미국인 부호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의 이름을 따서 Stop Soros Law로 불림.
-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난민의 역내 강제할당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여 2016년 10월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는 오르반 총리는 소로스가 중동 국가들에서 탈출한 무슬림 난민을 헝가리에 끌어들여 유럽 문화의 기본 가치를 훼손코자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 헝가리는 게르만 민족 또는 슬라브 민족으로 이루어진 주변국들과 달리 마자르 민족이 주축을 이룬 나라로 과거 오스트리아 제국 치하에서 민족의식이 대단히 강했으며, 현재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외국인과 소수자, 특히 집시로 알려진 로마족(Romani) 주민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심한 나라로 꼽힘.
- 2018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Stop Soros Law가 EU의 기본권 헌장을 위반한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9월 유럽의회는 헝가리의 의회 내 표결권 제한 결의안을 채택하며 Stop Soros Law의 폐기 또는 수정을 압박했으나 헝가리 정부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해당 사안은 EJC에 회부되었음.
- 2021년 11월 16일 ECJ는 Stop Soros Law에 대해 "EU가 난민에 대해 보장하는 개인 및 조직의 접근권과 의사소통권을 제한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법률가와 상담할 권리도 침해하여 EU 망명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결하였으며, Stop Soros Law의 내용이 지체 없이 바뀌지 않을 경우 EU 차원에서 헝가리에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 헝가리 정부는 ECJ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안의 철회 또는 수정 절차를 밟을 전망이나,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기존의 이민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민 문제를 놓고 EU와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EU,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폴란드와 헝가리에 법치주의 준수를 촉구

- EU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 폴란드 대법원은 기존의 5개 재판부를 2개의 새로운 재판부로 대체하여 규모를 축소한다고 발표, EU와 정면 대결을 지속할 것임을 사실상 선언하였음. 다만 ECJ가 명령한 대법원 징계위원회 중단은 수용하며, 2021년 말까지 동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실행에 옮길 것인지는 미지수임.
- 이에 11월 19일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 앞으로 양국 정부의 법치주의 준수 여부에 관해 질의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였음. 동 서한은 양국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삭감 또는 전면 중단을 사전 경고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2개월 내로 동 서한에 공식 답변할 것을 양국 정부에 요구하였음.¹⁾
- 동 서한은 폴란드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성 유지와 EU 법/규정에 대한 존중 문제, 헝가리에 대해서는 공공조달과 관련된 부패와 이해관계 상충 문제(EU 보조금의 오/남용 포함)에 대한 질의를 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 <https://www.politico.eu/article/eu-rule-of-law-penalty-process-poland-hungary> (조회일자: 2021.11.19.)



- 현재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 중 폴란드와 헝가리에 각각 할당된 360억 유로 및 72억 유로의 집행 승인을 보류 중임. EU 집행위원회의 디디에 렌데르 사무국장은 10월 17일 Bloomberg TV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특히 폴란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위해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음.
- 앞서 2020년 7월 EU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EU 경제의 회생을 위해 총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조성 및 1조 740억 유로 규모의 장기 예산안 편성에 합의한 바 있음. 당시 EU는 폴란드와 헝가리에 경제회복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법치주의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양국의 법치주의 준수 여부를 ECJ의 판단에 맡긴다고 발표하였음.
- EU는 경제적 열위에 있는 구공산권 회원국들에게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폴란드는 2020년에는 GDP의 약 4%에 해당하는 180억 유로를 수령하여 (2014~20년 수령액은 1,058억 유로) 27개 EU 회원국들 중 최대 수혜국임. 폴란드 재무부는 폴란드 경제성장의 약 4분의 1이 EU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음.
- 이처럼 폴란드와 헝가리가 EU와 갈등을 거듭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Brexit에 이어 **Polexit(폴란드의 EU 탈퇴)**와 **Hunexit(헝가리의 EU 탈퇴)**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의 EU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를 고려해볼 때, 이러한 갈등이 양국의 EU 탈퇴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함.



II. 폴란드와 헝가리의 대EU 경제의존도 분석

폴란드와 헝가리는 EU 예산의 회원국별 수령액 규모에서 각각 1위 및 10위 유지

- EU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하면, EU-28의 첫 해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²⁾ 간 28개 회원국들이 수령한 EU의 예산지출(Total Expenditure) 누적액 9,006억 3,812만 유로 가운데 폴란드는 1,041억 5,969만 유로(11.57%), 헝가리는 394억 8,878만 유로(4.38%)를 수령하여 28개 회원국들 중 각각 수령액 1위와 10위를 기록하였음.
- 2014~20년 폴란드와 헝가리의 재정수입 누계액은 각각 1조 3,210억 42.0백만 유로 및 3,965억 83.6백만 유로였으며, 따라서 동 기간 중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예산 수령액은 각각 폴란드와 헝가리의 재정수입의 7.9% 및 10.0%에 해당됨.
- 동 기간 중 EU로부터의 예산 수령액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연도별 비중은 폴란드의 경우 최저 6.4%(2017년)에서 최고 10.9%(2014년), 헝가리의 경우 최저 7.2%(2017년)에서 최고 13.2%(2014년)를 기록하였음. 2020년에는 폴란드의 경우 8.3%, 헝가리의 경우 10.3%를 각각 기록하였음.
- 한편, 2014~20년 EU 예산 편성에 대한 EU 회원국들로부터의 기여분(Total National Contribution) 누적액 8,279억 3,498만 유로 가운데 폴란드는 270억 8,000만 유로(3.27%), 헝가리는 70억 9,021만 유로(0.86%)를 기여함으로써 각각 EU 예산 기여분의 3.85배 및 5.57배에 해당하는 EU 예산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됨.
- 따라서 폴란드와 헝가리는 룩셈부르크(5.83배), 불가리아(5.00배), 라트비아(4.98배), 리투아니아(4.57배), 그리스(3.98배), 루마니아(3.88배), 에스토니아(3.82배), 슬로바키아(3.48배), 체코(3.22배)와 더불어 예산 기여액의 3배 이상을 EU로부터 수령하는 혜택을 받았음.
- 2020년에도 28개 회원국들이 수령한 EU의 예산지출 누적액 1,472억 7,039만 유로 가운데 폴란드는 180억 9,178만 유로(12.28%, 폴란드 GDP의 3.5%), 헝가리는 61억 4,366만 유로(4.17%, 헝가리 GDP의 4.5%)를 수령하여 28개 회원국들 중 수령액 1위와 10위를 각각 기록하였음.
- Eurostat에 의하면 2020년 폴란드와 헝가리의 재정수입은 각각 2,174억 82.6백만 유로 및 595억 72.9백만 유로였으며, 따라서 동 기간 중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예산 수령액은 각각 폴란드와 헝가리의 재정수입의 8.3% 및 10.3%에 해당됨.
- 아울러 2020년 EU 예산 편성에 대한 폴란드와 헝가리의 기여액은 각각 48억 8,096만 유로 및 12억 9,851만 유로임. 즉, 폴란드와 헝가리는 각각 EU 예산 기여액의 3.19배 및 4.16배에 해당하는 EU 예산을 수령하였음.
- Eurostat에 의하면 2020년 폴란드와 헝가리의 재정지출은 각각 2,548억 64백만 유로와 704억 56백만 유로이며, 따라서 동 기간 중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예산 기여액은 각각 폴란드와 헝가리의 재정지출의 1.9% 및 1.8%에 불과함.

2) EU의 예산지출 항목 대분류가 2013년 ①Sustainable Growth, ②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③Citizenship,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④The EU as a Global Partner, ⑤Administration, ⑥Compensations에서 2014년 ①Smart and Inclusive Growth, ②Sustainable Growth: Natural Resources, ③Security and Citizenship, ④Global Europe, ⑤Administration, ⑥Compensations, ⑦Negative Reserve, ⑧Special Instruments로 개편됨에 따라 2014~20년 중 누계를 분석



- 폴란드와 헝가리의 예산 기여액이 EU 전체 예산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20년 누계 기준 각각 1.9% 및 1.7%, 2020년 기준 각각 1.9% 및 1.8%에 불과하여, 폴란드와 헝가리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비교해볼 때 EU 가입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훨씬 많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³⁾

[표 1] 2014~20년 폴란드의 재정수지 및 EU 예산 할당액

금액단위: 백만 유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누계
재정수입	159,471	168,223	165,375	185,964	205,563	218,964	217,483	1,321,042
재정지출	174,381	179,399	175,565	192,915	206,781	222,896	254,864	1,406,802
재정수지	-14,910	-11,176	-10,190	-6,951	-1,219	-3,932	-37,382	-85,760
EU 예산 수령액	17,436	13,358	10,638	11,921	16,350	16,366	18,092	104,160
EU 예산 기여액	3,526	3,718	3,709	3,048	3,983	4,214	4,881	27,080
EU 예산 수령액/재정수입	10.9%	7.9%	6.4%	6.4%	8.0%	7.5%	8.3%	7.9%
EU 예산 기여액/재정지출	2.0%	2.1%	2.1%	1.6%	1.9%	1.9%	1.9%	1.9%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표 2] 2014~20년 헝가리의 재정수지 및 EU 예산 할당액

금액단위: 백만 유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누계
재정수입	50,232	54,563	52,316	56,219	59,917	63,718	59,573	396,539
재정지출	53,181	56,824	54,405	59,343	62,791	66,788	70,456	423,788
재정수지	-2,949	-2,260	-2,089	-3,124	-2,874	-3,070	-10,883	-27,249
EU 예산 수령액	6,620	5,629	4,546	4,049	6,298	6,203	6,144	39,489
EU 예산 기여액	890	946	969	821	1,076	1,090	1,299	7,090
EU 예산 수령액/재정수입	13.2%	10.3%	8.7%	7.2%	10.5%	9.7%	10.3%	10.0%
EU 예산 기여액/재정지출	1.7%	1.7%	1.8%	1.4%	1.7%	1.6%	1.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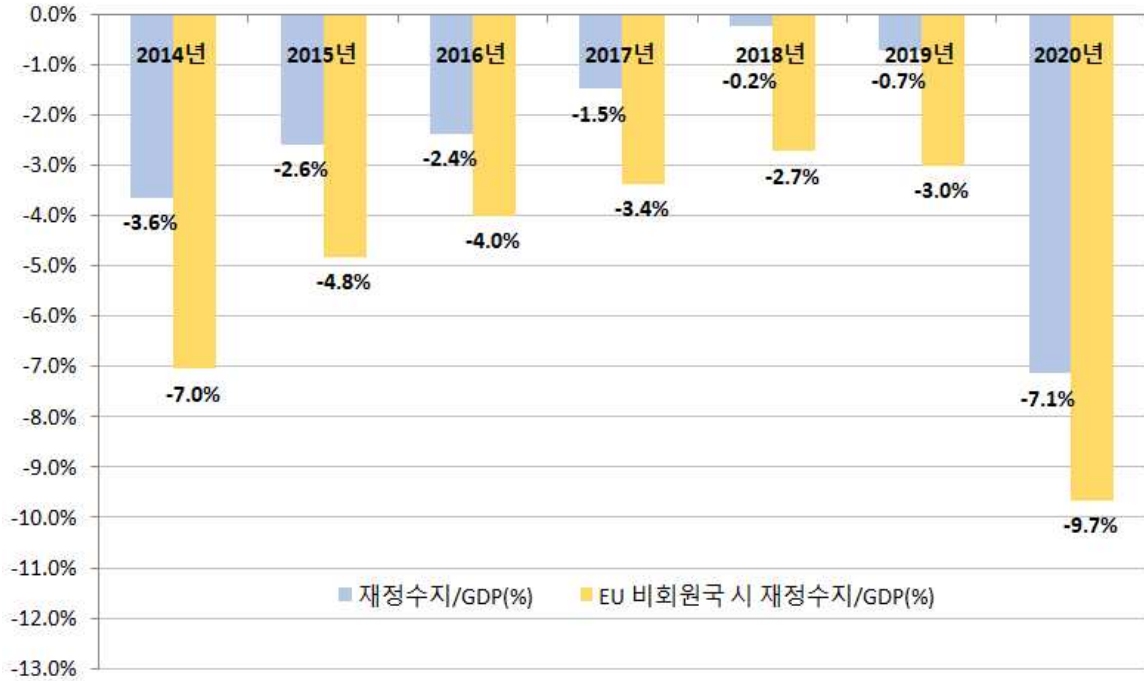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 한편, 2014~20년 중 폴란드와 헝가리가 EU 회원국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 재정수입에서는 EU 예산 수령액이 차감되고 재정지출에서도 EU 예산 기여액이 차감됨. 이렇게 재계산된 재정수지(폴란드와 헝가리가 EU 비회원국일 경우) 적자의 GDP 대비 비중은 폴란드의 경우 적게는 1.4배(2020년: -7.1% → -9.7%)에서 많게는 11.1배(2018년: -0.2% → -2.7%), 헝가리의 경우 적게는 1.4배(2020년: -8.0% → -11.5%)에서 많게는 3.1배(2015년: -2.0% → -6.2%)로 급등하게 됨.
- 즉, 폴란드와 헝가리는 EU를 탈퇴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가 현저히 악화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국채 발행 등이 불가피해져 대내적으로는 조세 저항에 직면하고 대외적으로는 외채부담이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추정됨.
- 외채부담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폴란드 즈워티화와 헝가리 포린트화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외채상환부담의 가중 및 수입물가 상승과 그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연쇄반응을 일으켜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가경제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손상시킬 위험이 있음.

3) ec.europa.eu/info/strategy/eu-budget/long-term-eu-budget/2014-2020/spending-and-revenue_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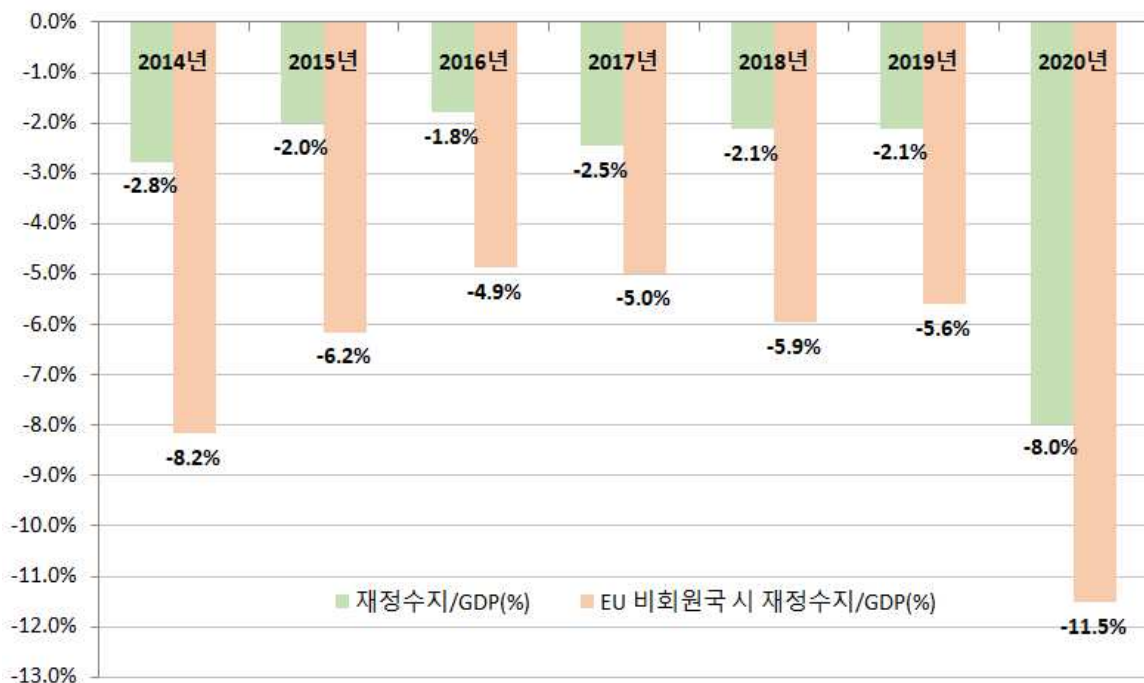


[그림 2] 2014~20년 폴란드의 재정수지/GDP 비중: 실제 수치와 EU 비회원국일 경우 비교



* EU 비회원국일 경우의 재정수지 = (재정수입 - EU 예산 수령액) - (재정지출 - EU 예산 기여액)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그림 3] 2014~20년 헝가리의 재정수지/GDP 비중: 실제 수치와 EU 비회원국일 경우 비교



* EU 비회원국일 경우의 재정수지 = (재정수입 - EU 예산 수령액) - (재정지출 - EU 예산 기여액)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폴란드와 헝가리 모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EU에 과도하게 편중

1) 폴란드 : 상품수출액의 70% 이상 및 상품수입액의 50% 이상, 서비스수출액의 60% 이상 및 서비스수입의 70% 이상이 EU에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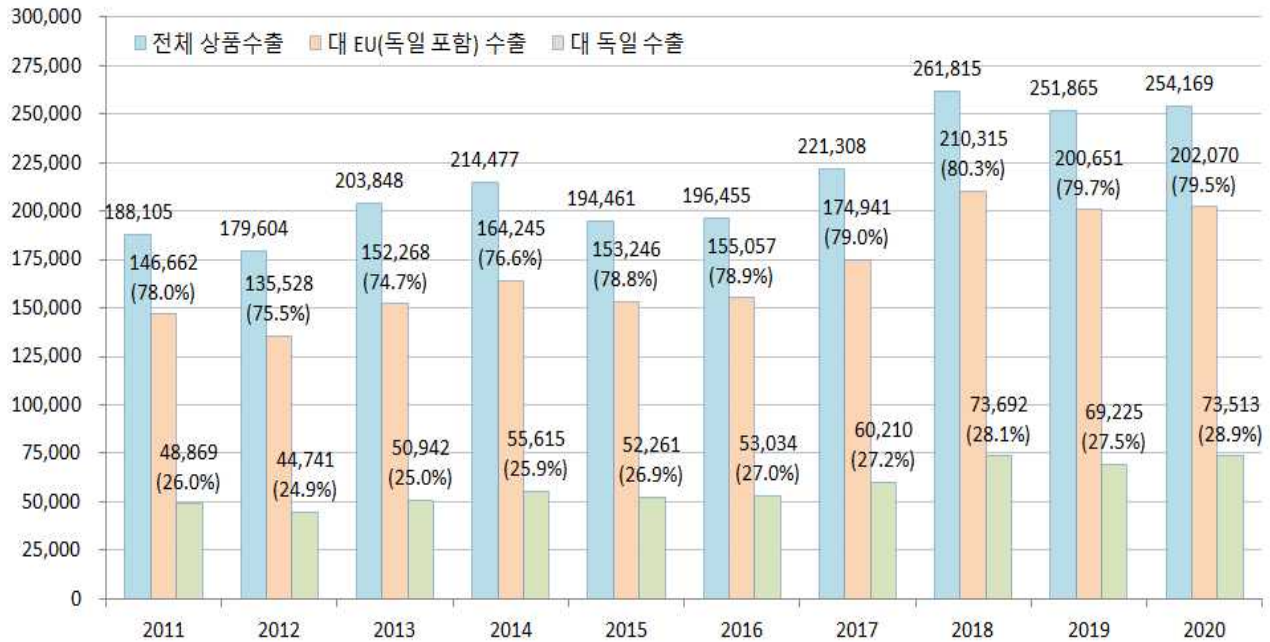
- UNCTADstat에 의하면, 최근 10년 간(2011~20년) 폴란드의 상품수출액에서 여타 EU 회원국들로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 사이를 유지하고 있음.
- 2011~20년 평균 상품수출액 중 여타 EU 회원국들로의 수출액 비중은 78.1%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EU의 리더이자 최대 경제국인 독일로의 수출액이 2011~20년 평균 전체 수출액의 26.7%를 점유하고 있음.
- 2020년 폴란드의 상품수출 대상국 상위 5개국은 독일(793억 1,711만 달러), 체코(160억 4,262만 달러), 영국(156억 4,723만 달러), 프랑스(152억 8,752만 달러), 이탈리아(118억 6,270만 달러)의 순으로, 2020년 2월 1일부로 EU를 탈퇴한 영국 외에는 모두 EU 회원국들임.
- 한편, 최근 10년 간 폴란드의 상품수입액에서 여타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5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음.
- 2011~20년 평균 상품수입액 중 여타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58.1%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독일로부터의 수입액이 2011~20년 평균 전체 수입액의 22.0%를 점유하고 있음.
- 2020년 폴란드의 상품수입 대상국 상위 5개국은 독일(721억 5,816만 달러), 중국(266억 8,022만 달러), 네덜란드(161억 4,67만 달러), 이탈리아(134억 3,753만 달러), 러시아(113억 6,738만 달러)의 순으로, 중국(2위)과 러시아(5위) 외에는 모두 EU 회원국들임.
- 최근 9년 간(2011~19년)⁴⁾ 폴란드의 서비스수출액에서 여타 EU 회원국들로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
- 2011~19년 평균 서비스수출액 중 여타 EU 회원국들로의 수입액 비중은 69.9%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독일로의 수출액이 2011~20년 평균 전체 수출액의 24.6%를 점유하고 있음.
- 한편, 최근 9년 간 폴란드의 서비스수입액에서 여타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80%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1~19년 평균 서비스수입액 중 여타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78.3%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독일로부터의 수입액이 2011~20년 평균 전체 수입액의 20.7%를 점유하고 있음.

4) UNCTADstat은 전 세계 서비스 수출입의 경우 2021.12.28.자 현재 2020년 무역상대국별 데이터를 아직 업데이트 하지 않음.



[그림 4] 2011~20년 폴란드의 상품수출액에서 EU와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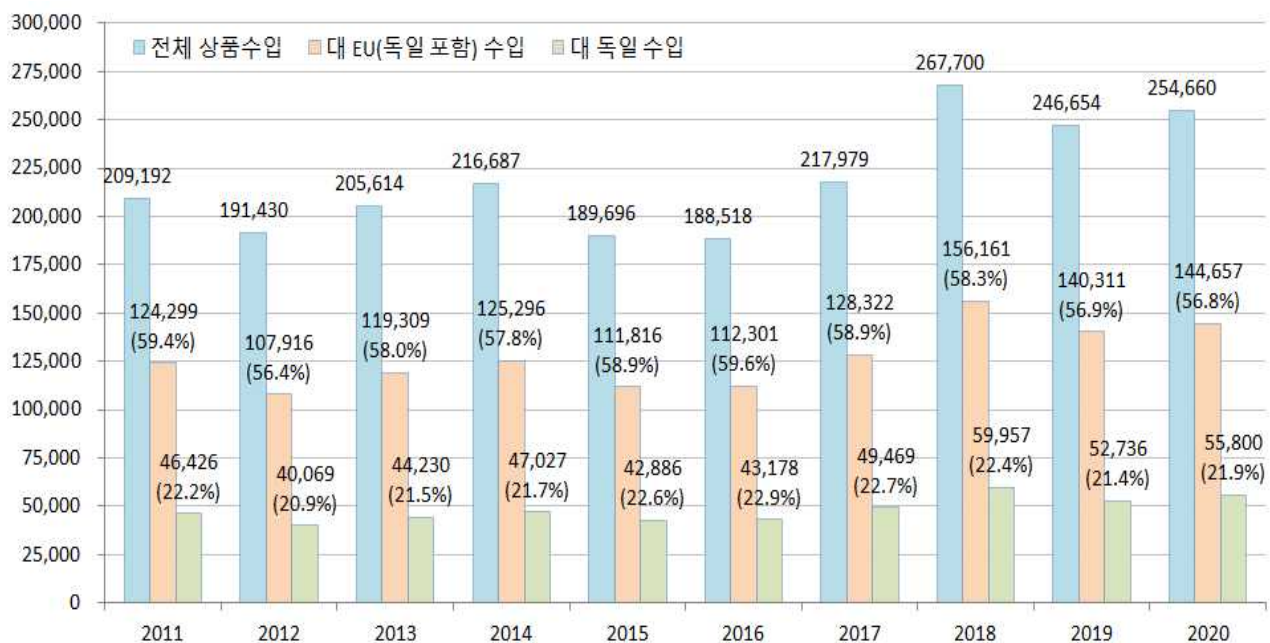
금액 단위: 백만 유로



자료: UNCTADstat

[그림 5] 2011~20년 폴란드의 상품수입액에서 EU와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금액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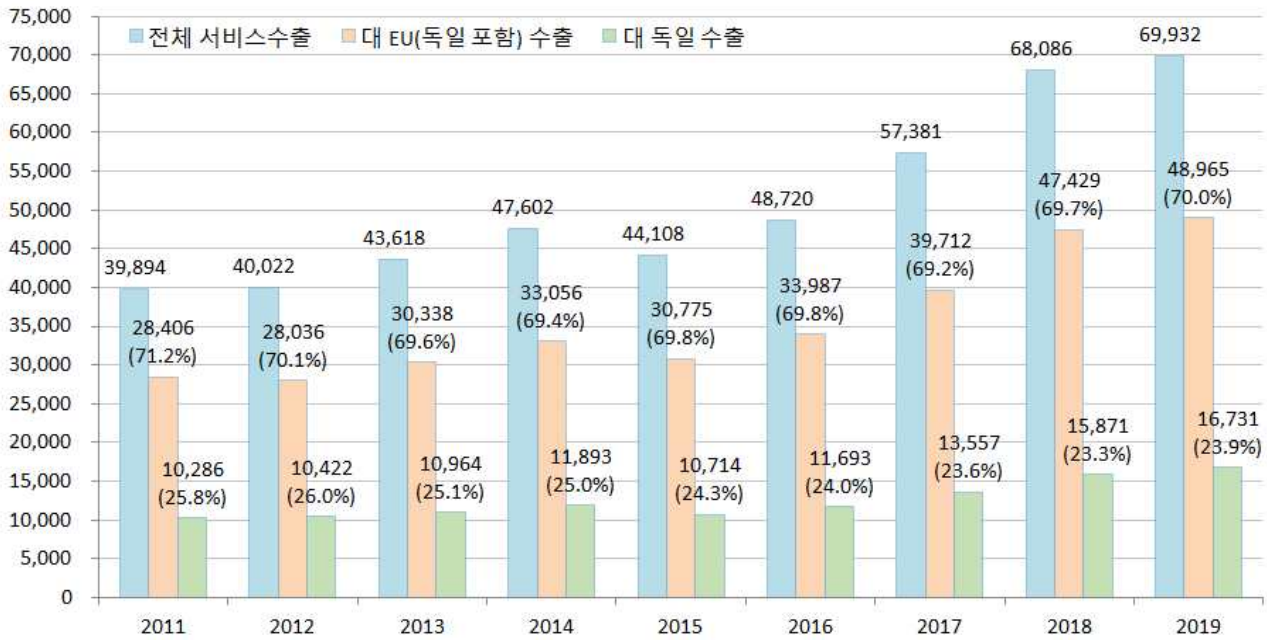


자료: UNCTADstat



[그림 6] 2011~19년 폴란드의 서비스수출액에서 EU와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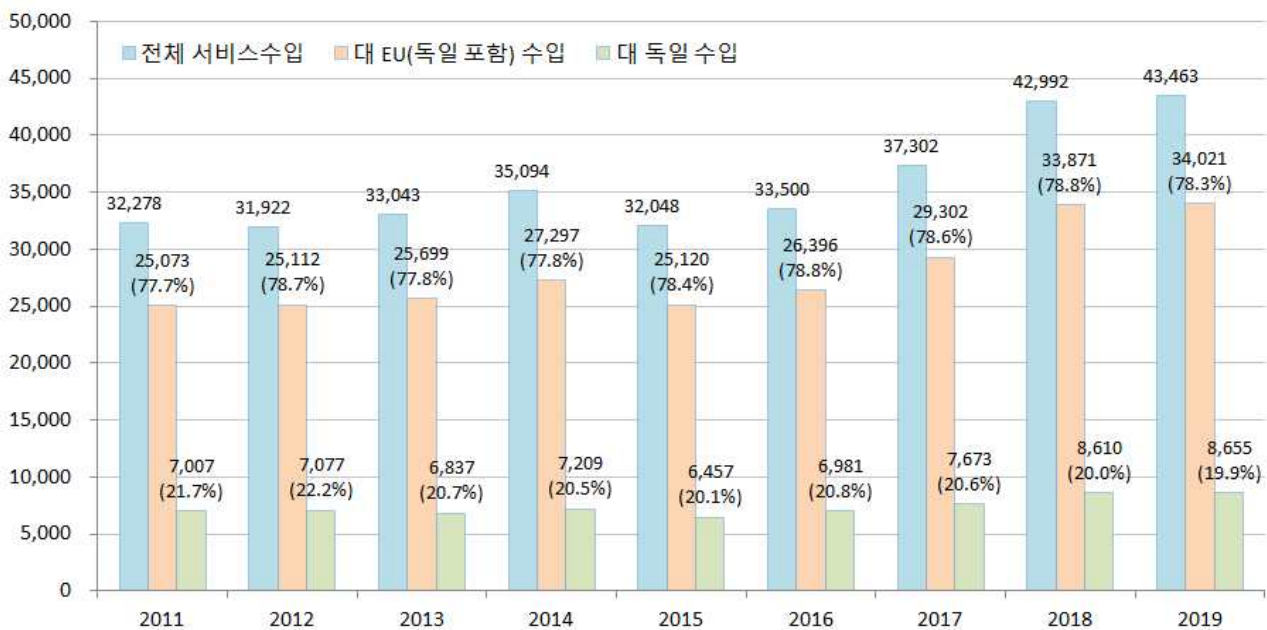
금액 단위: 백만 유로



자료: UNCTADstat

[그림 7] 2011~19년 폴란드의 서비스수입액에서 EU와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금액 단위: 백만 유로



자료: UNCTA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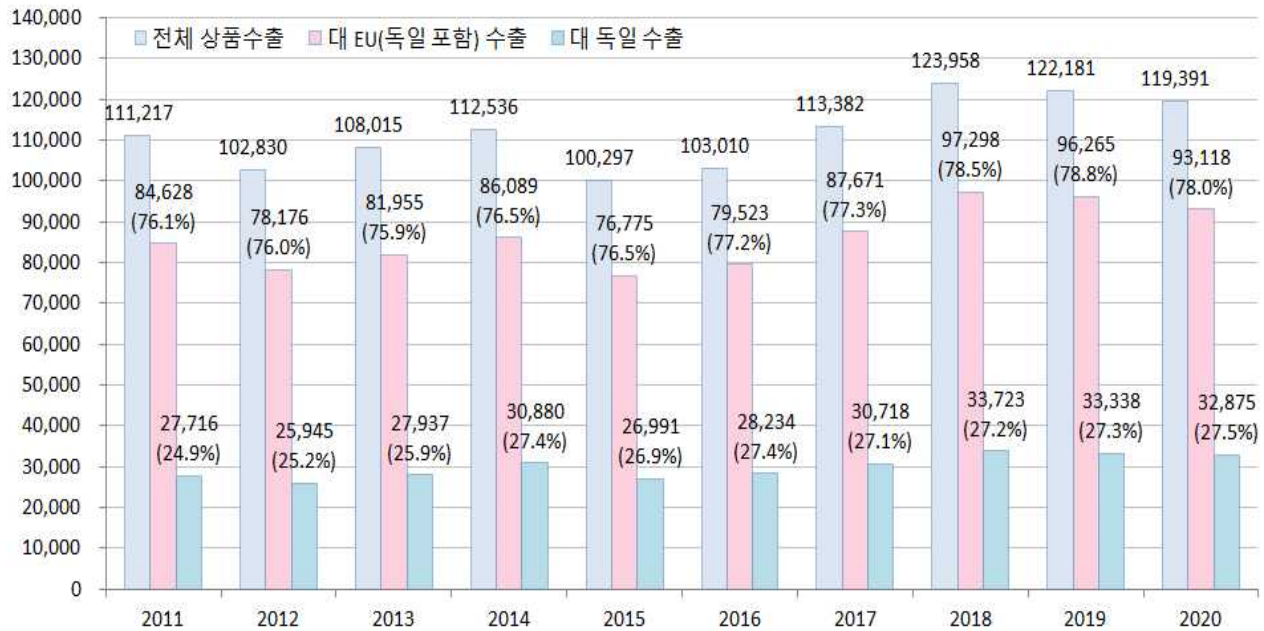
2) 헝가리 : 상품수출액과 상품수입액, 서비스수출액과 서비스 수입액 모두 70% 이상이 EU에 편중

- UNCTADstat에 의하면, 최근 10년 간(2011~20년) 헝가리의 상품수출액에서 여타 EU 회원국들로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7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음.
- 2011~20년 평균 상품수출액 중 여타 EU 회원국들로의 수출액 비중은 77.1%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독일로의 수출액이 2011~20년 평균 전체 수출액의 26.7%를 점유하고 있음.
- 2020년 헝가리의 상품수출 대상국 상위 5개국은 독일(338억 4,025만 달러), 슬로바키아(65억 9,729만 달러), 루마니아(64억 8,317만 달러), 이탈리아(63억 1,471만 달러), 오스트리아(54억 4,742만 달러)의 순으로, 모두 EU 회원국들임.
- 한편, 최근 10년 간 헝가리의 상품수입액에서 여타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69.8%)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70%를 웃돌고 있음.
- 2011~20년 평균 상품수입액 중 여타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74.1%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독일로부터의 수입액이 2011~20년 평균 전체 수입액의 25.4%를 점유하고 있음.
- 2020년 헝가리의 상품수출 대상국 상위 5개국은 독일(282억 7,416만 달러), 중국(104억 5,489만 달러), 오스트리아(67억 9,514만 달러), 폴란드(66억 1,376만 달러), 네덜란드(58억 3,249만 달러)의 순으로, 중국(2위) 외에는 모두 EU 회원국들임.
- 최근 9년 간 헝가리의 서비스수출액에서 여타 EU 회원국들로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70%를 웃돌고 있음.
- 2011~19년 평균 서비스수출액 중 여타 EU 회원국들로의 수입액 비중은 71.0%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독일로의 수출액이 2011~20년 평균 전체 수출액의 18.4%를 기록하였음.
- 한편, 최근 9년 간 헝가리의 서비스수입액에서 여타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70%를 웃돌고 있음.
- 2011~19년 평균 서비스수입액 중 여타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74.2%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독일로부터의 수입액이 2011~20년 평균 전체 수입액의 21.7%를 기록하여 최대 서비스수입 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이처럼 폴란드와 헝가리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EU에 대해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EU를 탈퇴할 경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서 보듯이 EU 회원국들과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을 받게 되어 교역의 급격한 위축 및 그로 인한 경기침체, 경상수지 악화, 외환보유액 감소,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의 급등을 비롯하여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8] 2011~20년 헝가리의 상품수출액에서 EU와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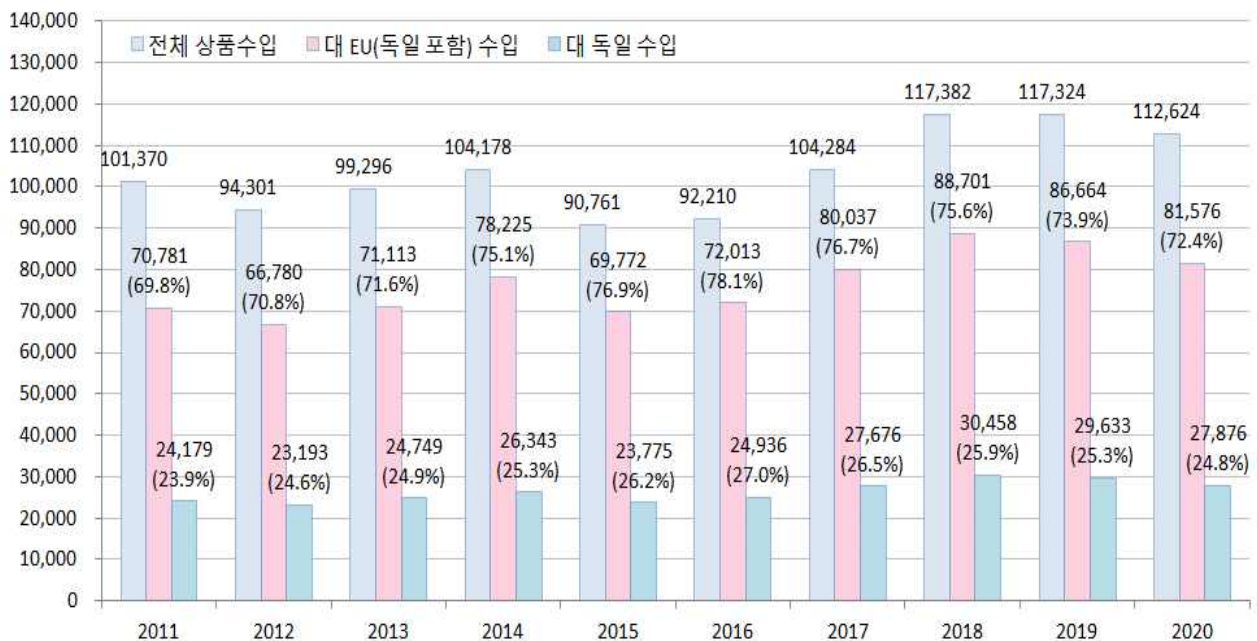
금액 단위: 백만 유로



자료: UNCTADstat

[그림 9] 2011~20년 헝가리의 상품수입액에서 EU와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금액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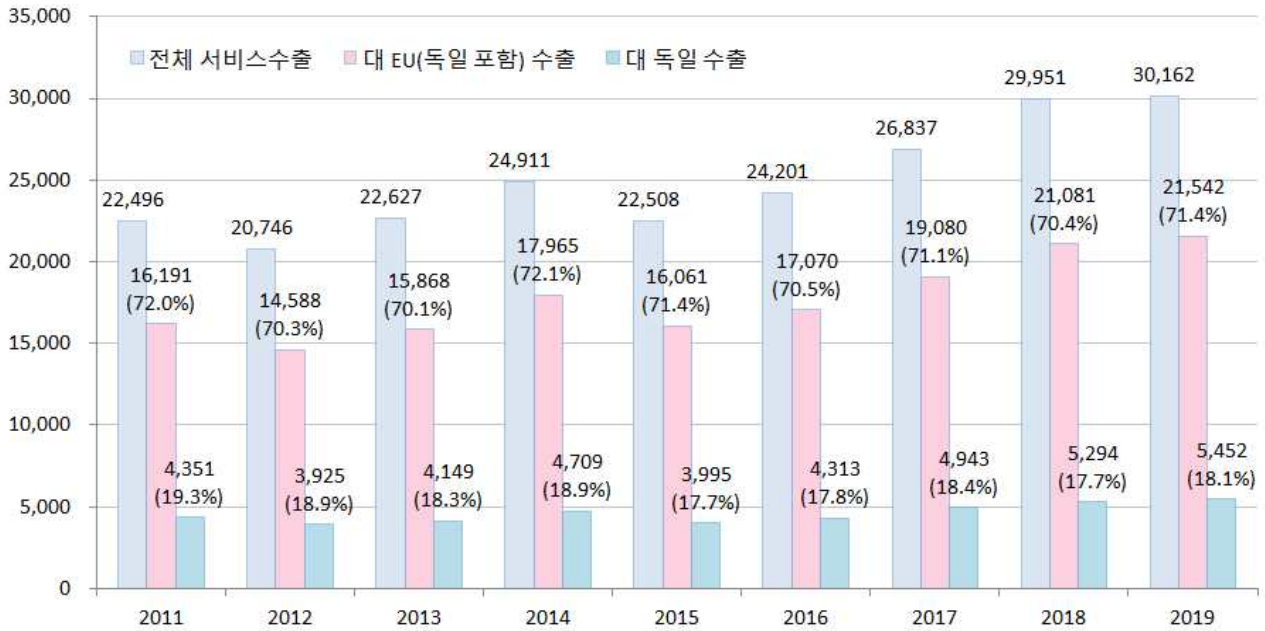


자료: UNCTADstat



[그림 10] 2011~19년 헝가리의 서비스수출액에서 EU와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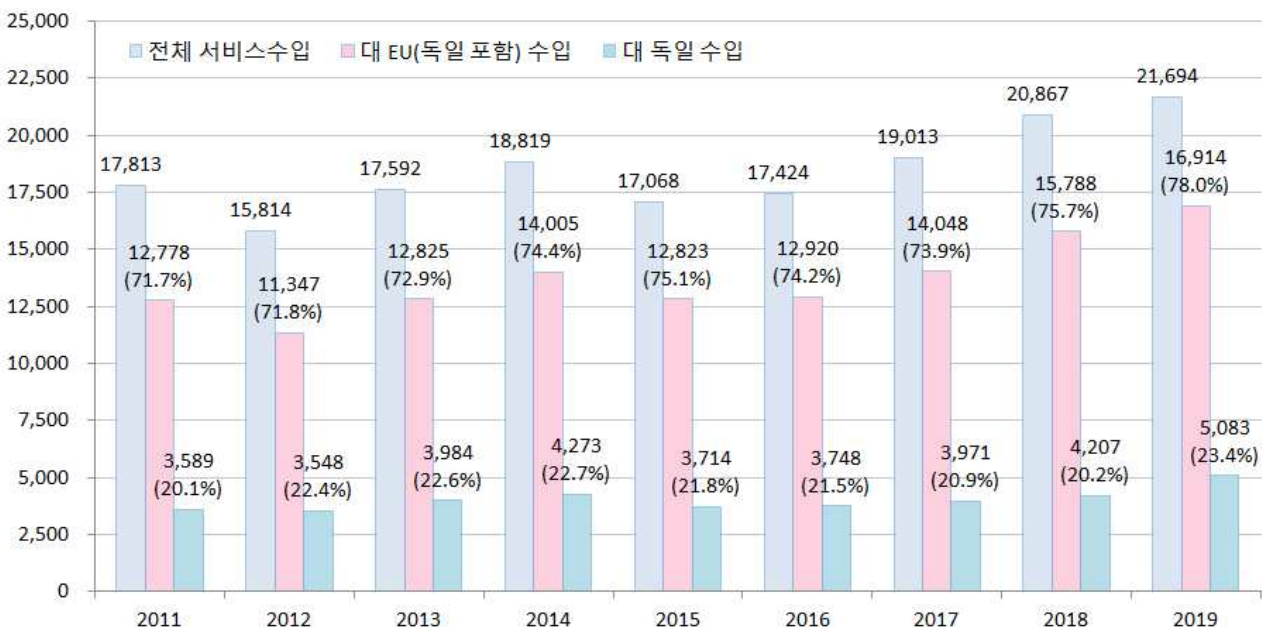
금액단위: 백만 유로



자료: UNCTADstat

[그림 11] 2011~19년 헝가리의 서비스수입액에서 EU와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금액단위: 백만 유로



자료: UNCTADstat



EU 회원국 지위에 크게 의존하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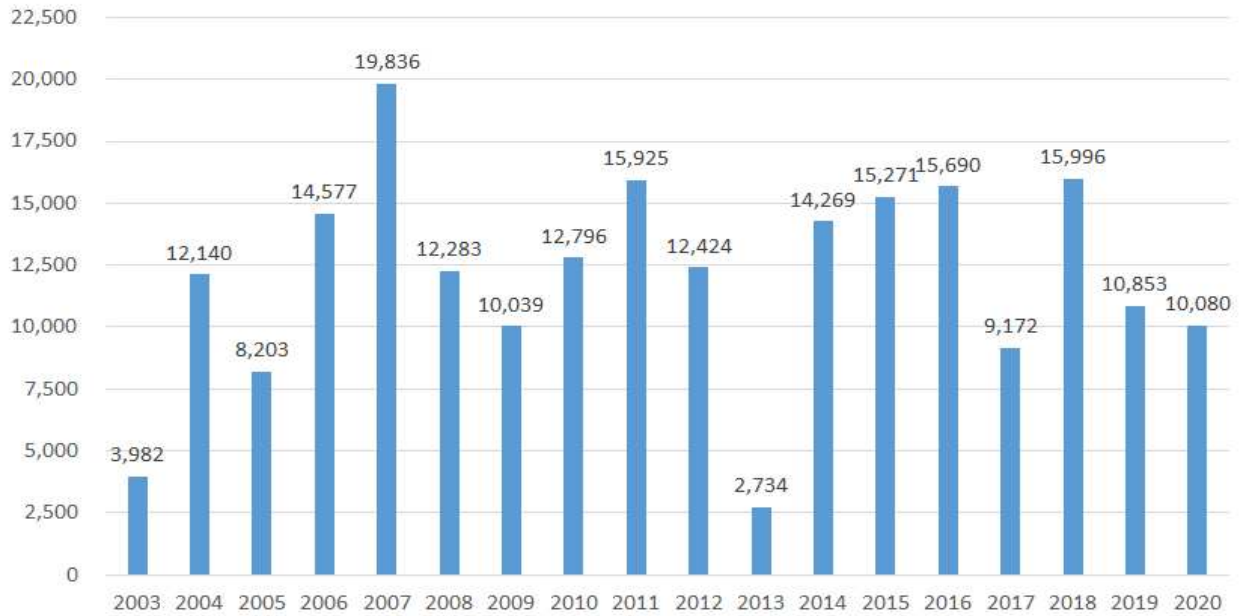
- 폴란드와 헝가리는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그리고 무엇보다 EU 회원국이자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 가입국으로서 EU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접근 및 EU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인력 이동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여타 EU 회원국 기업들은 물론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EU 비회원국 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유치해 오고 있음. 따라서 FDI 유입은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제성장은 물론 외환보유액 제고, 일자리 증가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UNCTADStat에 의하면, 폴란드의 FDI 연간 유입액 및 연말 잔액은 EU 가입 직전년도인 2003년 3,982백만 달러 및 56,110백만 달러에서 EU 가입 첫 해인 2004년 10,140백만 달러 및 84,102백만 달러로 각각 급증하였음. 2020년 폴란드의 FDI 연간 유입액 및 연말 잔액은 10,080백만 달러 및 248,732백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 헝가리의 FDI 연간 유입액도 EU 가입 직전년도인 2003년 2,137백만 달러에서 EU 가입 첫 해인 2004년 4,266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2020년 헝가리의 연간 FDI 유입액 및 연말 잔액은 4,169백만 달러 및 100,993백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 2011~19년 양국 모두 동유럽 공산권 붕괴 후 민주적 선거에 의해 수립된 정부가 본격 출범한 해인 1991년부터 EU 가입 전년도인 2003년까지의 연평균 FDI 유입액은 폴란드 41억 8,465만 달러 및 헝가리 28억 9,092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2003년의 경우 FDI 유입액은 폴란드 39억 8,231만 달러 및 헝가리 21억 3,740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 이후 양국의 EU 가입 첫 해인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FDI 유입액은 폴란드 124억 8,758만 달러(1991~2003년 평균보다 198.4% 증가) 및 헝가리 37억 8,680만 달러(1991~2003년 평균보다 31.0% 증가)⁵⁾로 집계되었음.
- 이처럼 폴란드와 헝가리의 FDI 유입은 양국이 EU 회원국으로서 EU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쉥겐 조약 가입국으로서 여타 가입국들(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들 포함)과의 자유로운 인적, 물적 이동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EU를 탈퇴할 경우(EU 탈퇴는 쉥겐 조약 탈퇴로도 이어질 전망), 이는 FDI 유입 급감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의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경상수지 악화, 외환보유액 감소, 실업률 증가 등의 연쇄반응을 일으켜 양국 모두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5) 헝가리는 2015년 및 2016년에 대규모의 FDI 철수가 발생하여 FDI 유입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써 FDI 증가율이 폴란드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12] 2003~20년 폴란드의 FDI 연간 유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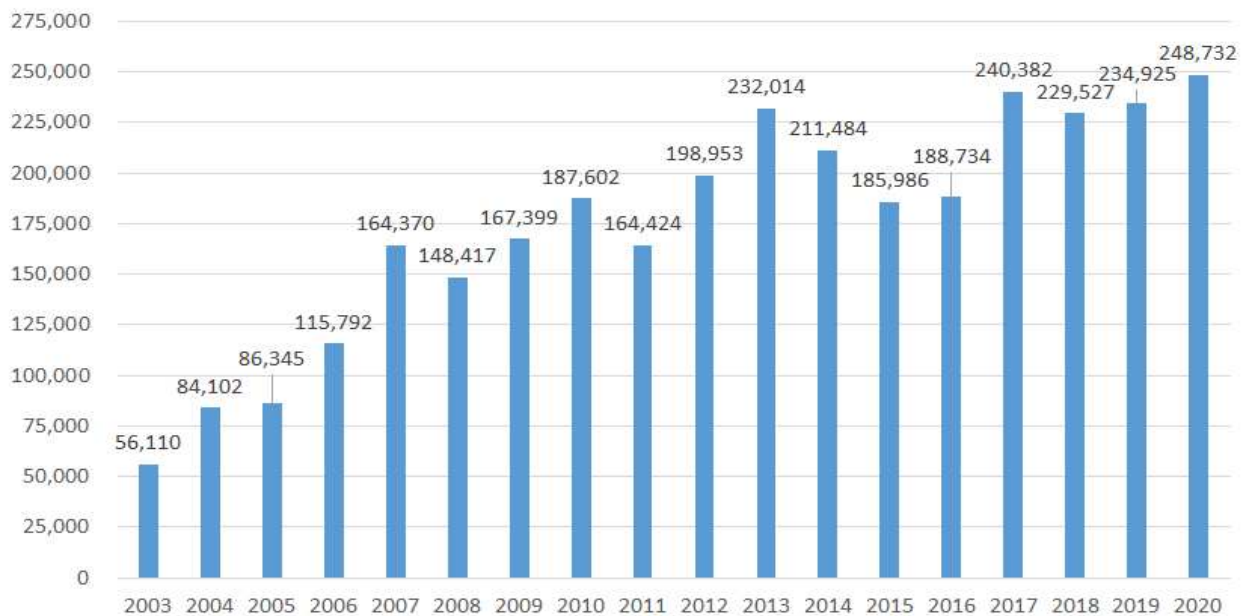
금액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Stat

[그림 13] 2003~20년 폴란드의 FDI 연말 잔액 추이

금액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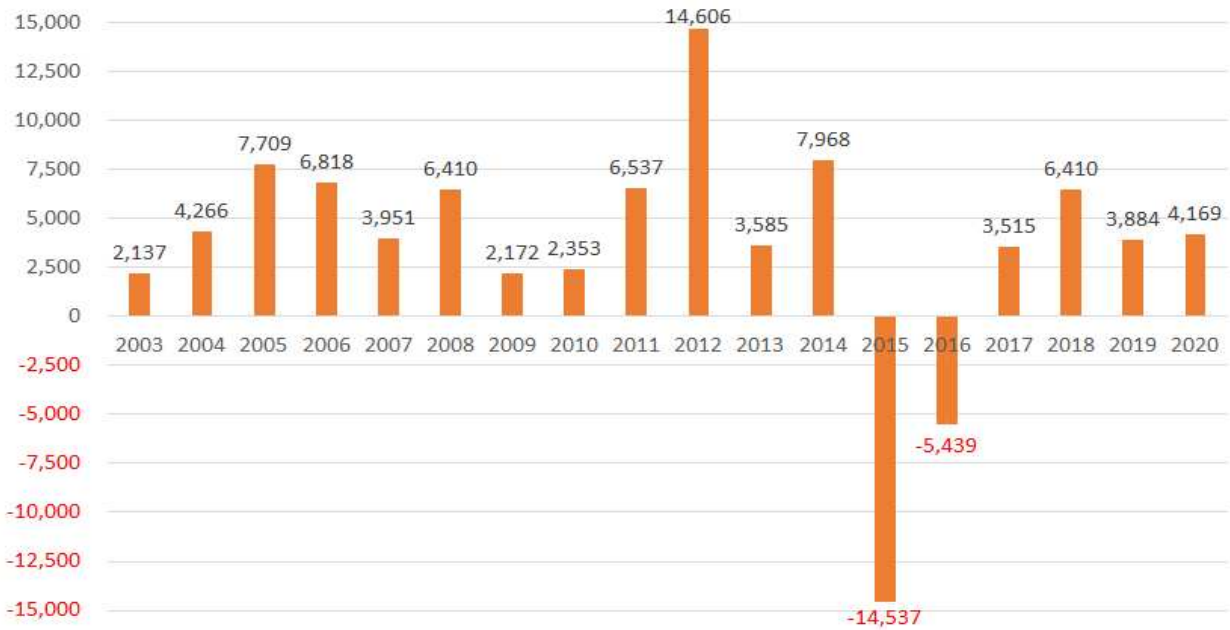


자료: UNCTADStat



[그림 14] 2003~20년 헝가리의 FDI 연간 유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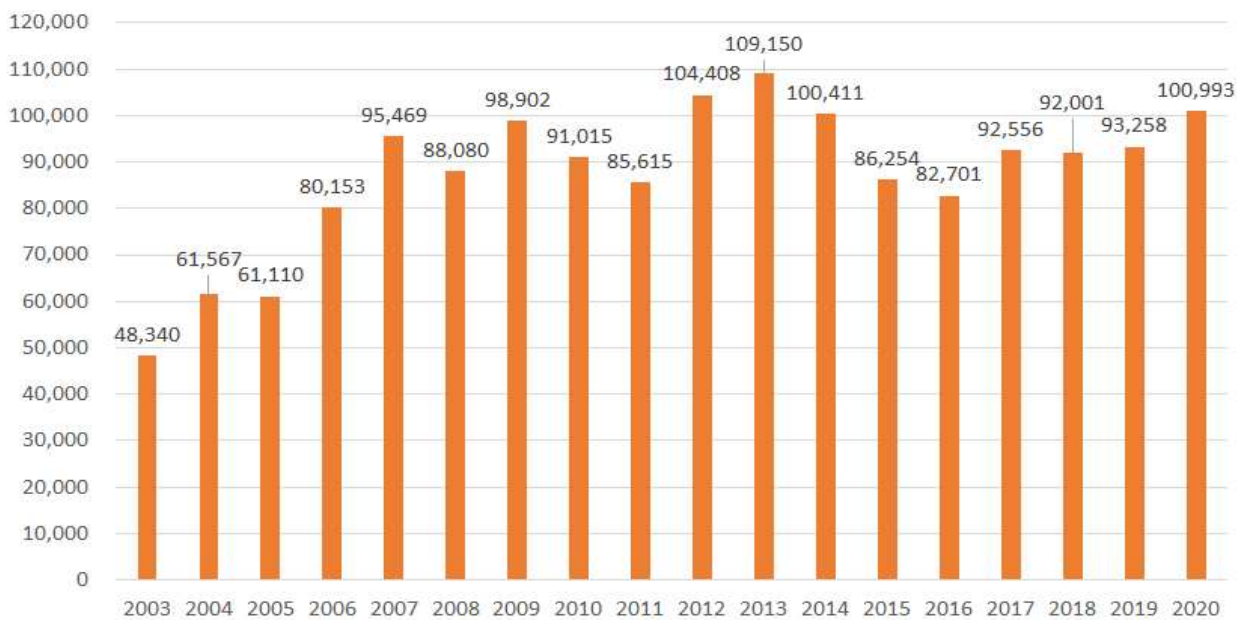
금액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Stat

[그림 15] 2003~20년 헝가리의 FDI 연말 잔액 추이

금액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Stat



Ⅲ. 결론 및 시사점

폴란드와 헝가리 모두 EU 탈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 앞서 분석한 바대로 폴란드와 헝가리 모두 EU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고, 보조금 수혜, 무역 및 투자 유치상의 이익 등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이익이 EU 탈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EU 차원의 법규를 자국 법률보다 우위에 둘 필요가 없음)보다 월등한 것으로 판단되어, 폴란드와 헝가리가 실제로 EU를 탈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임.
- 특히 폴란드의 경우, 인접국이자 오랜 적대관계인 러시아로부터의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해 국민의 80% 이상이 EU 탈퇴를 반대하고 있으며, EU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마저 폴란드의 EU 탈퇴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음.
 - 러시아(소련)는 18세기의 폴란드 분할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전까지 폴란드 영토의 63.15%를 병탄하고 지배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폴란드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통해 냉전 종식 전까지 폴란드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해 왔음.
 - 이로 인해 폴란드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우 강하며, EU 탈퇴는 폴란드를 다시금 러시아의 지배 아래 예측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 폴란드 정부가 EU 탈퇴로 인한 손실을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만회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정권 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10월 10일 폴란드에서 대규모 EU 지지 시위가 벌어졌음. 폴란드 헌법이 EU 조약보다 우위에 있다는 10월 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촉발된 동 시위는 야권 주도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수도 바르샤바에서만 8만~10만 명이 참가하였음. 시위대는 폴란드 국기와 EU 깃발을 흔들며 “우리는 EU에 남을 것”이라는 구호 등을 외쳤음.
 - 이에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의 EU 탈퇴는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으며, Reuters의 보도에 의하면 2021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EU를 신뢰하는 폴란드 시민이 자국 정부를 신뢰하는 시민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폴란드는 EU의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등지로부터 유입된 대규모 난민을 EU 지역으로 들여보내려고 시도하는 인접국 벨라루스와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 EU 탈퇴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매우 고조되어 있음.

헝가리는 폴란드보다 EU 탈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역시 희박한 수준

- 그럼에도 EU 탈퇴 가능성을 비교해볼 경우, 폴란드보다는 헝가리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은 편으로 관측됨. 헝가리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EU와 NATO의 회원국임에도 이들 양대 기구들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적극적인 우호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오르반 총리의 극우 민족주의적 성향과 독재 추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점도 이러한 우호관계 추진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임.



- 오르반 총리는 크림 반도 침공 사태로 시작된 EU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등 친러시아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음. 이러한 헝가리 정부의 태도는 향후 EU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헝가리의 Paks 원자력발전소 확장 공사(발전용량 1,200MW 규모의 원자로 2기 증설)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Rosatom이 맡아 진행될 예정이며, 동 프로젝트의 총공사비 125억 유로 중 100억 유로가 러시아 국영 금융기관들로부터의 대출로 조달될 계획으로 알려짐.
- 헝가리 정부는 2021년 1월 20일 EU 회원국 중 최초로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1월 22일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Gazprom과는 기존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15년 간 연장하는 재계약도 체결하였음. 아울러 헝가리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개발은행에 참여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아울러 헝가리는 2015년 중국과 신 실크로드(New Silk Road) 협정 체결을 통해 중국의 중부 유럽 내 중점 협력국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공공 프로젝트를 비롯한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 중임. 이처럼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은 헝가리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EU와의 관계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4월 24일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0km의 고속철도 건설 자금의 조달을 위해 중국 정부와 18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차관협정(20년 만기, 원금상환 유예기간 5년, 연이율 2.5%)을 체결하였음.
-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 사업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사상 첫 EU 역내 진출로,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에 대한 책임론이 미국과 EU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차이나머니'를 통해 동유럽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EU 분열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헝가리 정부는 2021년 1월 14일 중국산 시노팜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월 29일 EU 회원국 중 최초로 중국산 시노팜 백신을 승인하였으며, 4월 29일에는 부다페스트에 중국 푸단대학교 분교를 설립⁶⁾하는 합의문에 서명하였음.
- 다만,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헝가리의 EU 탈퇴가 EU 예산 수령액 포기, 무역규모 및 FDI 유입의 급감, 그로 인한 실업률 급상승 등으로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연쇄적인 악영향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으므로, 헝가리의 EU 탈퇴 가능성 역시 희박한 수준임.

우리 기업들의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전망

- 2020년 말 기준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누계액 101,193,035천 달러 중 폴란드는 4,222,846천 달러로 4.2%, 헝가리는 1,934,394천 달러로 1.9%를 각각 점유하였음.
- 폴란드보다 비중이 더 높은 유럽 국가/지역들은 영국(18.5%), 룩셈부르크(13.7%), 네덜란드(13.3%), 독일(6.4%), 아일랜드(6.9%), 프랑스(5.1%), 저지 섬(조세회피처, 4.3%) 등임.

6) 설립에 소요되는 총액 15억 유로의 예산 중 13억 유로는 중국 국영은행이 헝가리 정부에 제공하는 차관으로 조달되고, 학교 건물의 건축은 중국 건설기업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며, 중국인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공사를 담당하는 등 중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요구한 조건과 완전히 동일한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는' 불평등한 계약 조건임. 아울러 건설예정 부지는 원래 지방에서 부다페스트로 올라온 대학생들을 위한 낮은 임대료의 공공주택 건설 예정지로 알려짐.



- 폴란드, 헝가리와 함께 비셰그라드 그룹(Visegrád Group)⁷⁾ 회원국들인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각각 1,695,270천 달러(유럽 전체의 1.7%) 및 1,381,823천 달러(유럽 전체의 1.4%)에 그쳤음.
- 우리 기업의 2020년 말 기준 대 폴란드 투자누계액 중 제조업 부문에 대한 누계액은 3,721,095천 달러로 88.1%를 점유하고 있음. 또한 동 누계액은 우리 기업의 유럽 지역에 대한 제조업 투자 누계액의 15.9%(1위)에 해당함.
- 우리 기업의 2020년 말 기준 대 헝가리 투자누계액 중 제조업 부문에 대한 누계액은 1,621,797천 달러로 83.8%를 점유하고 있음. 또한 동 누계액은 우리 기업의 유럽 지역에 대한 제조업 투자 누계액의 6.9%(5위)에 해당함.
- 한편, 2020년 말 기준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지역 직접투자 누계액 101,193,035천 달러 중 제조업 부문의 누계액은 23,376,372천 달러로 23.1%를 점유, 1위의 금융 및 보험업(25,204,965천 달러, 24.9%)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음. 즉, 폴란드와 헝가리 2개국의 제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누계액은 유럽 전체 제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누계액의 22.9%를 점유하고 있음.

[표 3] 2020년 말 기준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지역 제조업 투자 누계액 순위

단위: 천미불

순위	국명	투자누계액	비중
1	폴란드	3,721,095	15.9%
2	네덜란드	2,353,083	10.1%
3	독일	2,168,245	9.3%
4	러시아	1,664,312	7.1%
5	헝가리	1,621,797	6.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이처럼 폴란드와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접근,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유럽 중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등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에게도 유럽 지역 제조업 투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특히 헝가리는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소득세율(9%), 거주자 법인 및 비거주자 법인 대상 원천과세율(0%)을 앞세워 우리 기업들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일각에서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탈퇴 가능성을 제기하며, EU 시장을 타깃으로 양국에 투자하여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그러나 전술한 바대로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탈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며, 따라서 EU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들의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직접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7)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약체, 1991년 2월 15일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3개국 정부 대표단이 헝가리의 소도시 비셰그라드에서 만나 외교·경제·안보 등을 협의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며,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됨에 따라 회원국은 현재의 4개국으로 늘어났음. 비셰그라드 4개국은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하였음.